

# 국민의당 '박정천', 安 비판 한목소리

### 박지원 "DJ 말할 자격 없다"… 정동영 "골목독재" · 말 믿을 수 없다"… 천정배 "국민과 당원 배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다음날인 21일 당내 대표적 통합 반대파로 일명 '박정천'으로 비유되는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대표는 DJ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치)가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던데 DJ는 보수야합 합당을 거부했다"며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회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분들과 같이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유 대표와 안 대표를 비교하면 쪽팔릴 겁니다. 지난 대선 TV토론 안 봤나. (안 대표가) 유 대표한테 질질 끌려 다니잖나"라며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니 하지만 유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 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것이다. 이게 뻔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통합에 찬성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의원총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당 반대파에게서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의원총회에 나오지도 않고 도망쳐버리는 '도침수'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안 대표의 행보를 '골목



노사정 화합 퍼포먼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외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하면 더 멀리 갑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노사정 화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독재'라고 비유하며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은 펼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신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다"며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결국은 유신독재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저는 당원 주권론자다. 그런데 전당원 투표에서 이 본질을 묻는 게 아니다"며 "말하자면 뿌리가 다른 바른정당, 나아가 자유한국당 일부와 합치겠다는 보수야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통합 반대인가 찬성인가'라고 묻는다. 통합은 긍정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물으면 '통합이 많다'고 한다. 그는 "한국 정당사회에서 수많은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강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인 그런 일방 합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안 대표) 지금 너 달 동안 오로지 합당 관련 분란과 분열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 대표의 리더십에 있어 치명적인 것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런 신뢰 상실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지도력이 추락한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어제부로 식물대표가 됐고 압도적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상태라고 본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초심을 잃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지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끌어내겠다는 것은 정당법이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것이고, 안 대표가 아주 독단적인

로, 독재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합당 방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전 대표도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유신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그 독재적인 발상과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해서, 안 대표 불신임을 결의했다. 사퇴하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의원총회에서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적어도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구나 개혁을 바라는 많은 민심, 또 지지자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억지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딱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당내 의원들의 합당 찬반 현황이 2대 13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말도 적절치 않다. 사실은 분열적인 합당"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최은희,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전북지체장애인협회는 21일 을 한해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열심히 활동한 인물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사진)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회 측은 최은희 의원이 그동안 장애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 전라북도 지역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열어가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에 7만 지체장애인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최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장상,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에 이은 삼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 의원은 "의민생활 내내 도내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차별받지 않고 불편이나 위험 없이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공공행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합당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우미 징역 1년... 이준서 8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어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이들이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문준용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5월7일자 기자회견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 기자회견을 다른 두명과 공모했다고 보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날 오전 갑자기 결정된 것이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

##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투표 결정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전날(20일) 밝힌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안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철근 대변인은 21일 당무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의결안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무회는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건 ▲중앙당선거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건 ▲관련 위원의 건 ▲기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 당원투표 건은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됐다. /뉴스

## 민주 개혁의총 '상시국회 도입 · 국감 폐지' 합의

### "비준 조약체결 국회 동의권 강화 공감 · 국회 인사권 확대 동의" ... "의견 수렴 뒤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여야 이견차이가 큰 '정부형태'를 주제로, 의원들의 발제 ·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대변인은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해 체적으로 공감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국회 인사권 확대 방식에 대해서 정부형태와 관계 없이 국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예우가 현재 헌법 규정에 있는데 헌법상의 제

한 없이 법률로 정하고 있어 헌법 근거를 삭제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협치형 대통령제', 이종걸 의원이 '독일형 내각책임제', 전현희 의원이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혁과 관련한 4차례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

